

한은, 기준금리 인상 무게추… 美 물가·워시 발언 ‘주목’

오는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관건은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
고물가·원화약세 등 변수 동시다발

7월 기준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시장의 시선이 ‘인상 여부’에서 ‘추가 인상 경로’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 소비자물가와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첫 의회 증언이 원·달러 환율과 국내 물가 기대를 자극할 경우 신현송 체제 한국은행의 긴축 신호는 더 강해질 수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통위가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p) 올릴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인상이 결정되면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이다.

이번 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7월 인상 자체보다 이후 경로다. 기준금리 2.75%가 이번 긴축의 종착점인지, 연 3.00%를 향한 중간 지점인지에 따라 채권금리와 환율, 주식시장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월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내수 부담과 대외 불확실성을 강조하면 시장은 이를 일회성 조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반대로 물가, 환율,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을 강하게 언급하면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은 더 커진다.

금리 인상 명분은 이미 상당 부분 쌓였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2% 올라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웃돌았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2.5%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이 3%대에 머무는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장 모멘텀이 개선되고,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 불안도 다시 통화정책 판단 변수로 부상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도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한은의 판단이 국내 변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은 금통위에 앞서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워시 의장의 의회 증언이 예정돼 있다. 미국 CPI는 한국시간으로 14일 밤 발

표된다.

같은 날 워시 의장은 하원에서 취임 후 첫 통화정책 증언에 나선다. 통상 절차대로라면 15일 상원 증언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은 금통위 직전 미국 물가와 연준의 정책 메시지가 연달아 나오는 셈이다.

미국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연준의 긴축 경계감은 다시 커질 수 있다. 이는 미 국채금리와 달러를 밀어 올리고, 원화 약세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원화 약세가 수입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한은은 7월 이후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닫기 어려워진다. 반대로 미국 물가가 둔화되고 워시 의장이 신중한 정책 운영을 강조하면 한은도 7월 인상 이후 속도 조절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워시 의장의 발언 수위도 중요하다. 워시 의장은 취임 이후 공개 발언을 아끼고 시장과의 거리두기를 이어왔다. 그만큼 이번 의회 증언은 워시 체제 연준의 통화정책 반응합수를 확인하는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물가 안정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 달러 강세와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고, 경기 불확실성을 함께 강조하면 시장은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

성을 낮춰 볼 수 있다.

한은은 목표를 웃도는 물가와 성장 개선, 원화 약세, 수도권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동시에 봐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금리 인상이 환율 방어만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지만, 환율 변동성은 통화정책 부담을 키우는 변수로 올라섰다. 특히 원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수입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을 통해 물가 안정 경로를 흔들 수 있다.

금통위 당일 시장 반응은 기준금리 결정 자체보다 의결문 문구와 신 총재의 기자간담회 발언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시장이 더 주목하는 것은 7월의 0.25%p가 아니라 그다음이다. 미국 물가와 워시 의장의 발언, 원화 흐름에 따라 한은의 기준금리 경로는 2.75%에서 멈출 수도, 3.00%를 향해 다시 열릴 수도 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7월을 포함해 연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의 관심은 추가 인상 시기로 7월과 8월 연속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삼성 노조 84%,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반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입장문
내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서 다룰 것

4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가 노사 교섭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을 근거로 내년 임금·단체협약 교섭 의제에 반영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13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라며 “2027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관련 내용을 다뤄겠다”고 밝혔다.

노조가 문제 삼는 핵심은 투자 자체보다 향후 인력 운영이다. 삼성전자의 주요 반도체 생산시설은 경기 기흥·화성·평택

과 충남 온양에 집중돼 있다. 광주 신규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가동 과정에서 기존 사업장 인력의 전환배치가 이뤄질 경우 근무지와 주거, 통근,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개정 노조법을 교섭 요구의 근거로 제시했다.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실제 교섭 과정에서 투쟁 결정 자체보다 전환배치와 근무지 변경, 처우 등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발생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도 해석지침에서 사업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앞서 정부와 기업,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영현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장(부회장)이 원전 확대와 LNG(액화천연가스) 열병합발전 필요성을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사측도 사업 추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삼성전자가 호남 투자 계획에 반대하거나 재검토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 노조가 언급한 사측 발언 역시 노조 측 설명이다. 전 부회장의 당시 발언도 투자 계획 자체보다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을 위한 전력·용수 등 기반 인프라 지원 필요성을 정부에 요청한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달 광주에 약 400조원을 투자해 신규 팹 2기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은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광주 신규 팹의 착공 시기와 인력 운영 계획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이찬진 “운용사 ETF 과장광고 매우 엄중”

(금융감독원장)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국내 ETF 시장이 급성장하며 자산운용사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운용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향해 의결권 행사 내실화와 ETF 과장광고 근절,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투자자를 대신해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성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과 20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가 참석한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열고 올해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주주권 행사 체계 점검 결과와 자본시장 현안을 논의했다.

올해 수탁자책임 이행 수준 높아져 의결권 행사, 내부통제 강화 강조
모험자본 공급 통해 선순환 정착 기여



운용사가 투자자의 대리인으로서 피투자회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중요한 창구”라며 “투자자와 실질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정책과 공시 체계를 내실 있게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업무의 실질적인 변화는 적절한 조직 구성과 합당한 성과 보상에서 나온다”며 “전담조직과 수탁자 책임위원회, KPI 등 내부통제 체계를 갖춘 운용사일수록 주주활동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내 연기금의 위탁운용사 평가에서도 수탁자책임 활동 비중이 확대되는 만큼 CEO들이 직접 내부통제 체계를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ETF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경고도 내놴. 이 원장은 “투자자는 ETF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운용사 광고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거짓·과장광고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광고 제작과 자체 심의 과정에서 정확한 투자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고 LP 증권사와 함께 괴리율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자산운용사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자산운용사가 유망 기업을 발굴해 투자자금을 공급하고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에게 분배함으로써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 이후 7~8월 중 공·사모 운용사를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와 공시 관련 설명회를 열고 점검 기준과 결과, 모범·미흡 사례 등을 공유하며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metro

홈플러스, 전국 대형마트 점포 영업 중단

오는 20일까지 운영자금 상황 따라
회생절차 연장, 영업재개 여부 결정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운영자금 부족으로 결국 전국 대형마트 영업을 잠정 중단한다.

13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부터 본사와 전국 대형마트 매장의 영업을 임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일 서울 회생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오는 20일까지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제출할 경우 회생절차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메리츠 측에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재차 요청했지만 아직 수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대금 지급은 물론 유틸리티 비용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보안과 안전 유지를 위해 13일부터 상황 변화가 있을 때까지 본사와 대형마트 매장을 임시 휴업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필몰(몰) 부문은 입점 점주가 영업을 희망할 경우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회사는 입점 매장 영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



문을 닫은 서울 중랑구 홈플러스 면목점 모습. /뉴시스

겠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오는 20일까지 운영자금 확보 진행 상황과 법원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 뒤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